

대립각 커지는 우리당 親盧-非盧

친노 “정·김 당 떠나라” 비노 “오만방자”

이달내 결별 가능성… 당 분열 위기 고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당 해체 및 탈당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고 이에 반발해 우리당의 양 대개과 수장인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뒤 당내 친노(親盧), 비노(非盧) 세력간의 대립각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친노 세력은 정, 김 전 의장을 겨냥해 “무작정 당을 깨자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떠날 텐데 떠나라”고 비노 세력의 쌍두마차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비노세력은 “친노파가 대통합신당을 만들자는 2.14 전당대회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두 세력간의 대립이 격화일로를 걸으면서 우리당은 이달 안에 당이 조개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친노파로 분류되는 유기홍 의원은 지난 5일 “대안도 명분도 없이 무조건 당을 해체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어 우선은 당을 지키고 남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식으로 당을 나가 대통령이 이뤄질 수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굳이 떠나야겠다면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 김 전 의장을 겨냥했다.

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시민 보건복지 장관도 최근 우리당 종진의원과 만나 “우리(친노집계)는 당을 지킬 테니 떠날 분들은 떠나라. 비례대표 의원들은 편안하게 보내드리겠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 측근인 이광재 의원은 6일 “가출을 자꾸 하면 승판이 되고 탈당도 자꾸 하면 이마에 ‘주홍글씨’가 쓰여진다”며 “어려울 때 일 수록 결속해 난국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 있는 분들은 제발 말을 아껴달라”고 탈당파의 자중자애를 촉구했다.

■ 정동영·김근태 동반 탈당 규모 얼마?

열린우리당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이 이달 말 탈당을 결정할 경우 이에 동반할 세력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두 사람의 탈당은 ‘분당(分黨)’급 동반 탈당을 축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지만 실제로 동참할 의원들의 규모를 놓고는 관측이 크게 엇갈린다. 양대 계파의 수장이었던 두 사람의 조직장악력이 과거와는 판이한데다 우리당 자체의 통합추진 상황과 당 밖의 ‘환경’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당 앞에서는 양대 계파로 분류되는 의원 수를 고려할 때 40명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월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할 때 정동영계는 70명, 김근태계는 50명선이었지만 지금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각각 10~20명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친(親) 정동영 성향의 의원들은 체수찬·정청래 의원 등 지역구 의원이 9~10명이고, 비례대표는

했다.

김 전 의장측도 “친노파의 주장은 전대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라며 “전대 합의사항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통합신당을 만들자는 것으로, 우리당 해체는 당연한 것 아니냐. 당 해체는 갑자기 뛰어나온 주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탈당, 민생정치모임을 이끌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이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단식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와대가 개혁의 후퇴, 정치상 혼란의 대부분을 주도했다”며 노 대통령을 정조준한 뒤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사수파가 있는 한 우리당의 해체는 불가능하다. 정, 김 전 의장 등 대통합을 추진하는 분들은 우리당 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열린우리당의 대규모 2차 탈당이 예고된 가운데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정치행보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40명선 유력… 최대 60명 관측도

조직 장악력 약해 예상 인원수 밀돌 수도

박명광·박영선·김현미 의원 등 10명 안팎으로 모두 20명 안팎으로 분류된다.

김근태계는 15~16명 수준, 이인영·우원식·최규성 의원 등 지역구 의원 10명 가량과 유효희·홍미영 의원 등 비례대표가 5~6명이다.

이중 ‘자발적 탈당’이 불가능한 비례대표들을 빼면 두 사람이 직접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의원은 2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들의 동시 탈당은 당 전체에 심리적인 충격파를 던지면서 1차 집단탈당 당시 동참하지 못했던 ‘탈당유보층’을 다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충청과 인천, 경기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20명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탈당규모가 40명선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당의 ‘본진’이 움직이는 수준의 ‘60명선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중도성향을 보여온 ‘광장파’ 소속 중진·제선의원들, ‘미래포럼’ 소속 초선의원들, 정대철 상임고문이 이끄는 대선주자 연설회의파, 이복희 의원이 주도하는 초선모임 등에서 20여명의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동반탈당 규모가 예상을 밀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지지도가 낮은데다 탈당 이후의 ‘대선주자 연설회의’ 구상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총성도’가 높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유보 또는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당의 ‘본진’이 움직이는 수준의 ‘60명선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중도성향을 보여온 ‘광장파’ 소속 중진·제선의원들, ‘미래포럼’ 소속 초선의원들, 정대철 상임고문이 이끄는 대선주자 연설회의파, 이복희 의원이 주도하는 초선모임 등에서 20여명의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동반탈당 규모가 예상을 밀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지지도가 낮은데다 탈당 이후의 ‘대선주자 연설회의’ 구상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총성도’가 높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유보 또는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오늘은 축구심판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서초구 언남고에서 열린 유소년축구대회에서 심판으로 나서 양팀 선수들을 인사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신당’ 당명 사용 못해
선관위, 이미 등록돼 있어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 모임이 당명(黨名) 문제로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7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후 중앙선관위에 정식명칭 ‘중도개혁통합신당’, 약칭 ‘통합신당’으로 정당등록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뒤늦게 ‘통합신당’이란 약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최동림 목사는 대표자로 있는 중도통합신당이 지난 4일 시도지부 및 중앙당 창당을 완료하고 선관위에 정당등록 신청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신청서에 약칭을 통합신당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약칭을 포함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뿐만 아니라 구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신당모임은 선관위에 ‘통합신당’이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사용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연합뉴스

기업 19% “대선자금 요청 받았거나 받을 것”

“불법 자금 거부 하겠다” 절반도 못 미쳐

대한상의 1,300개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대통령 선거에 사용될 정치자금 지원 요청을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20% 가까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자금 제공 요구를 받았을 때 명백히 거부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절반에도 못 미쳐 부과와 비리로 얼룩진 혼탁선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천3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17대 대선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권의 대선자금 지원요청과 관련해서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는 기업

이 80.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의 개선된 정치풍토를 감안할 때 적다고 보기 어려운 19.1%의 기업이 ‘아직은 없지만 장차 있을 것으로 본다’(14.9%)거나 ‘미미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4.2%)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앞으로 정치자금 제공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21.1%로 중소기업의 13.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대선 자금 지원 요청시 대응방침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불법임을 들어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지만 ‘대응방침을 정하기 어렵다’(40.0%)거나 ‘법률적인 방법으로 선별 지원을 하겠다’(9.0%), ‘불법이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4.5%)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연합뉴스

“BDA 해결땐 북 2·13 이행 의지 확인”

방북 김혁규의원 밝혀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 2차 방북단이 6일 영동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북성과를 보고하는 자리

를 가졌다.

지난 2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평양을 다녀온 방북단은 남북경제협력추진단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경협단지 확대, 에너지 등 경제분야 협력방안

을 협의하는 데 1차적 목표를 뒀지만,

2·13 북핵 대화협정의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에서 북미관계 개선을 향한 북한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더 큰 성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이다.

방북단은 이끈 김혁규 의원은 가장 의미있는 성과에 대해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해결될 때 북한이 2·13 합의 내용을 확실히 이행하겠다

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문제도 공식의제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오히려 북측에서 남측의 의지가 있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핵문제나 북미관계가 잘 풀릴 경우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조심스런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방북이 자신의 대선행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나 대선전략적 의도로 방북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비 무료모집

과정 교육내용

기사단원 모집(교육기간: 07/06/1~3개월)
국제세계인기자 모집(교육기간: 07/06/1~3개월)
농어촌기자 모집(교육기간: 07/06/1~3개월)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교육내용(교육기간: 07/06/1~3개월)

주택관리사 주말반(토·일) 교육내용(교육기간: 07/06/1~3개월)

공인중개사 주말반(토·일) 교육내용(교육기간: 07/06/1~3개월)

주택관리사 주말반(토·일) 교육내용(교육기간: 07/06/1~3개월)

정보보호기사(국) 월드엑스 교육내용(교육기간: 07/06/1~3개월)